

'코로나19 여파에 팔 걷은 문 대통령 산업 생태계 지킨다

항공·해운 등 국내 9개 업종 기간산업 대표와 간담회

기간산업 위기시 '도미노 붕괴' 상황 막겠다는 의지
"대·중소기업 등 협력 절실" 자구노력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항공·해운·기계 등 국내 9개 업종 기간산업 대표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산업 생태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간산업이 휘청일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연계기업의 줄도산이나 실적 저급 등 '도미노 붕괴'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상생협력 노력 의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악화된 기간산업 상황을 설명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후방 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로 이뤄진 기간산업 특성상, 기간산업의 위기는 곧 산업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업 생태

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비롯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기업들도 자구 노력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한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각종 지원이 단순한 '개별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등 전체 국민의 삶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혁신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에게 애들러서 채용 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000명이 감소했다. 21년만의 가장 큰 폭 감소세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009년 1월 이후 최대인 24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신입 채용 계획 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에 따라 신입채용 등 고용 역할을 주문했다는 해석이다. /뉴스1

문 대통령,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형제복지원 등 진실 밝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며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했다.

또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자"라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

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 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돌아섰다.

그러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문희상 의장 "행복한 정치의 길이였다"

'명예퇴직' 소회 밝혀

20대 국회 마무리와 함께 '명예퇴직'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하루하루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였다"고 지난 정치 여정을 반추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1988년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지 33년 만이다.

문 의장은 1945년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했지만 6·3학생운동 등의 경력이 문제가 돼 임용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반독재 투쟁을 벌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다.

문 의장은 "1979년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처음 만난 날 그 모습이 지금도 강렬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다"며 "자유가 들끓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그 모습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1992년 14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의정부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문 의장은 15대 낙선을 제외하고 20대 총선까지 6선 의원을 지냈다.

문 의장은 퇴임 후에도 정치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與 "한명숙 사건, 공수처 소관"

김태년 "재심 불리...사법부 차원 재조사 바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강압수사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나와, 재심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고리로 검찰개혁 후속 작업 격인 법원개혁에 착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설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한씨의 비방목이 언론보도로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방목을 작성한 한씨가 이미 고인(故人)이 됐기 때문에 재심과 관련해선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무부, 법원, 검찰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우선 재심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가 비방목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져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증거나 진술이 명백히 위·변조됐거나 허위인 경우,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도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강압 등에 의한 허위 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는다"고 답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상당부분 이뤄냈으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을 놓고 법원개혁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뉴스1

제7회 전국 풀바 명인전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논개생가지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